

www.kita.net

KITA

통상 리포트

2022
VOL.08

미-중 무역전쟁 4년 경과 및 전망 - 양국 무역비중 및 탈동조화 검토

한국무역협회 이유진 수석연구원

Contents

미-중 무역전쟁 4년 경과 및 전망

요약	01
01. 미-중 무역현황 및 상호 무역비중	03
02. 미-중 무역전쟁 4년간 양국의 무역제재조치 및 영향	07
03. 양국의 공급망 재편 노력	22
04. 미-중 탈동조화 가능성	28

문의 : 이유진 수석연구원(02-6000-5649, yujin.lee@kita.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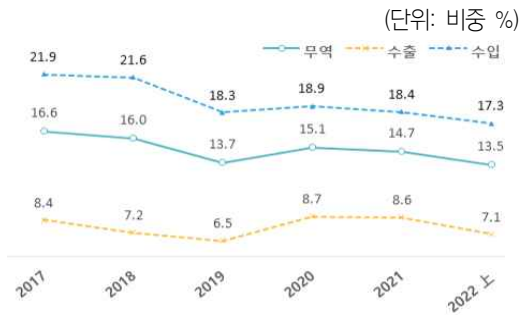
※ 본 리포트 인용시,
반드시 출처를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

2020년 1월 1단계 무역합의로 1년 반 동안 이어져 온 미중간 무역전쟁이 일단락되는 듯하였으나, 양국간 갈등은 무역을 넘어 정치, 외교, 기술 등 다방면으로 확대되었으며, 무역에서도 상호 의존도가 감소현상이 나타났다. 미국의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역전쟁 이전인 2017년 16.6%에서 2022년 상반기 13.5%로 하락했으며, 같은 기간 중국의 대미 무역 비중도 14.3%에서 12.5%까지 감소했다. 특히 미국의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1.9%에서 17.3%로 감소 폭이 4.5%p에 이르며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미국의 대중 무역 비중 추이>



<중국의 대미 무역 비중 추이>



자료: US Dataweb, 한국무역협회(K-stat)

301조 조치를 비롯한 다양한 무역제재들은 바이든 정권에서도 지속·심화되었으며, 동 조치들이 무역비중 감소에 일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301조는 전체 대중 수입의 3분의 2를 대상으로 최대 25%의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강력한 조치로 실행정부 출범으로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으나, 현재까지 유지 중이다. 화웨이 제재로 중국 반도체 산업에 큰 타격을 미친 수출통제 조치에 대해 미국 정부는 최근 통제 범위를 확장하고 있으며, 통신망·전력망에서 중국산 장비의 사용을 제한함에 따라 해당 장비 수입에서 중국의 비중이 크게 감소하기도 했다. 2022년에는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을 시행하여 인권탄압에 대한 제재를 무역에까지 확장하며 규제 강화를 이어갔다.

<미국의 대중국 무역제재 주요 현황>

제재조치	내용
301조 대중 추가관세	·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 3,6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최대 25%의 추가관세 부과 · 비제재품목 대비 301조 제재품목의 대중국 수입이 크게 감소 · 4년 기한 경과 했으나, 미국 국내 산업계 반발 및 정치적인 이유로 해제가 쉽지 않음
수출통제리스트 (Entity List)	· 민감 품목 및 기술의 대중국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수출통제 대상 리스트 관리 · 화웨이 제재 등으로 인해 중국 반도체 산업 전반에 타격 발생 · 최근에는 수출통제 대상을 확대하여 비교적 저사양 반도체장비(14나노) 수출까지 제재

통신장비 제재	· 법률 제정을 통해 중국산 통신장비 조달 금지, 중소 통신사 중국산 장비 대체 지원 · 미국 통신장비 수입에서 중국산 비중 크게 감소 · 다만 글로벌 시장에서는 여전히 화웨이, ZTE 등 중국산 장비가 높은 경쟁력 유지
전력장비 제재	· 핵심 국방시설에 중국산 장비 조달을 금지하는 트럼프 행정명령, 바이든 정부에서 해제 · 국방 시설 외에도 전력 설비의 전반적인 사이버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정책 지속 · 301조 관세, 전력업체의 안보위협 우려, 정부 규제 강화 등으로 대중 수입 비중 장기 하락세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 (UFLPA)	· 신장 위구르 지역 내 인권탄압 관련 제재가 2022년에는 무역분야로까지 확장 · 시행 초기로 효과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태양광 모듈 설비가 美 세관에 다수 억류된 상황

자료: 연구자 정리

미-중 무역전쟁, 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며 미국에서도 공급망 안정성이 핵심 과제로 부상했고, 공급망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의 통상정책도 개별 무역에 대한 제재에서 공급망 재편 정책으로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핵심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글로벌 기업의 대미 투자를 유인하는 등 리쇼어링 확대에 힘쓰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동맹 및 파트너와 연합하여 동맹중심 공급망 구축에 나서는 상황이다.

이에 중국은 미국의 무역제재에 대항하는 입법을 추진해 중국판 수출통제리스트와 수출통제법을 제정하고,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조치들로 중국이 부당한 피해를 보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법률의 역외적용 방지 방법'과 '반외국제재법'을 차례로 발표하였다. 각종 제재 방지 입법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실질적 효과가 크지 않은 수준에서 맞대응 방식을 취하며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피하고 있다.

다만 중국의 성장과 함께 미-중 간 패권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공급망 재편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패권경쟁은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미국은 중국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핵심 공급망에서 중국을 차단하고자 할 것이고, 중국은 경제 자립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공급망 재편을 추구할 것이다. 실제로 '중국제조 2025'에서 내세우는 반도체 자급률 70% 달성 목표는 미국과 미국의 파트너 국가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반도체 공급망의 대규모 변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

주요국과 글로벌 기업들은 중국의 상하이 봉쇄 등을 경험하며 높은 대중국 의존도의 위험성을 자각하게 되었다. 중국은 여전히 핵심 부품의 공급처이자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과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을 배제하기보다는 그 의존도를 낮추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과 구별되고 있다. 또한 중국을 완전히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인공위성 기술에서 그랬듯 중국은 장기적으로 기술 발전을 축적하며 미국에 대한 추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미중간 무역의 비중 감소와 공급망 탈동조화(디커플링)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나, 미국도 중국과 완전한 분리가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 이상 '언제, 어느 수준까지' 이어질 것인지에 주목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1 미-중 무역 현황 및 상호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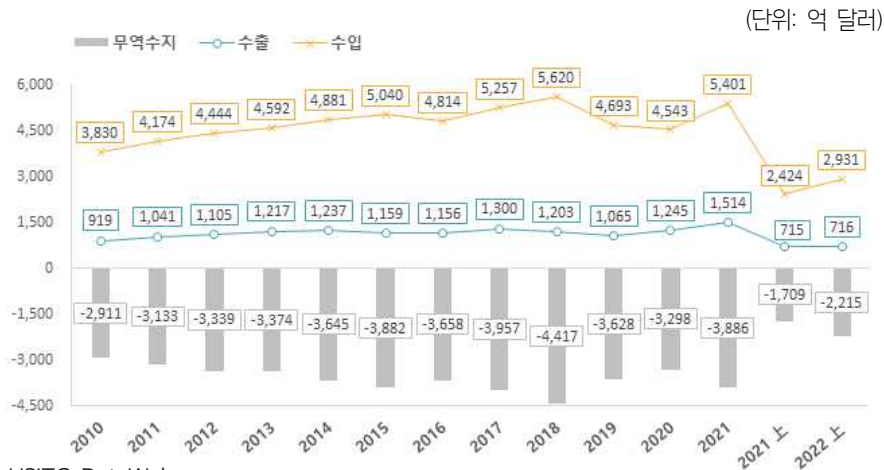
1. 미-중 무역전쟁 이후 양국의 무역 현황

□ (미국의 대중무역) 2018년부터 본격화된 무역전쟁과 20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대중국 무역규모가 다소 축소되는 듯 했으나, 최근 들어 대중 수입과 무역적자가 증가세로 반전

○ (수입) 2018년 5,620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2년 연속 감소하였으나, 2021년 5,401억 달러로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으며 2022년 상반기도 지난해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 (무역수지) 2018년부터 무역적자가 감소했으나, 2021년 3,886억 달러를 기록하며 다시 증가

<미국의 대중국 무역 추이>



자료: USITC DataWeb

□ 미국의 전체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역전쟁이 발생하기 이전인 2017년 16.6%에서 2022년 상반기 13.5%를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

○ 2010년대 초부터 지속된 대중국 무역 비중 증가세가 2017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

- 2020년의 경우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이 코로나19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동안 중국이 빠르게 경제를 정상화하면서 미국의 대중국 무역 비중이 일시적으로 증가

- 2022년 상반기 비중 감소는 상하이 봉쇄에 따른 생산 및 물류 차질의 영향도 있음

○ 특히 대중 수입은 2017년 21.9%에서 2022년 상반기 17.3%로 감소폭이 4.4%p에 이름

- 3,600억 달러 규모의 대중 수입에 최대 25%에 이르는 추가관세를 부과한 301조 조치의 영향으로 추정

<미국의 대중국 무역 비중 추이>



자료: USITC DataWeb

- 무역전쟁으로 미국의 수입시장에서 중국의 비중이 감소하는 동안 아세안 국가의 비중이 3.3%p 증가하며 주요국 가운데 가장 큰 증가폭 기록
- 중국과 홍콩,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미국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
- 아세안이 3.3%p로 증가폭이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베트남 2.0%p, 대만 1.0%p, 캐나다 0.8%p, 인도 0.7%p, 한국 0.5%p 순 (반올림으로 인해 그래프 상의 숫자와 계산이 상이할 수 있음)

<대상국가별 미국의 수입 비중 변화>



자료: USITC DataWeb

- (중국의 대미무역) 미중 무역전쟁 발생 이후 중국의 대미무역은 2019년 크게 감소하였으나, 2020년 증가세 전환 후 현재까지 지속
- (수출) 301조 추가관세 등의 여파로 2019년 대미 수출이 크게 감소했으나, 2020년 증가세 전환 후 2021년 역대 최고치인 5,764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22년에도 증가세를 이어감

- **(무역수지)** 대미 무역흑자는 2021년 1,795억 달러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2022년 상반기에도 전년 동기대비 무역흑자 확대

<중국의 대미 무역 추이>

(단위: 억 달러)



자료: UN Comtrade

주: 재수출·재수입, 수출·수입가격 책정 방식 등의 차이로 인해 미국 기준 무역 데이터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최대 규모의 대미 무역흑자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무역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중 무역전쟁 이후 하락세를 유지

- 중국의 대미 무역 비중은 2017년 14.3%에서 2019년 11.8%까지 하락 후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12.6%로 일시 증가하였으나, 지난 해 다시 하락세로 전환
 - 301조 추가관세 영향으로 비중이 하락하는 대미 수출과 달리 수입은 2019년을 저점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미중 1단계 무역합의에 따라 미국산 제품의 구매가 늘어난 데에 따른 영향
- 중국의 국별(권역별) 수입 비중에서 미국 비중이 1.6%p 감소하는 동안 EU가 2.2%p, 아세안 0.7%p, 인도와 대만 0.5%p 순으로 증가한 가운데, 한국과 일본은 2.2%p, 베트남은 1.7%p 감소

<중국의 대미 무역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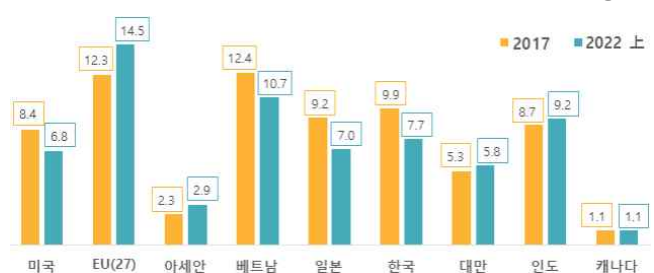
(단위: 비중 %)



자료: UN Comtrade

<대상국가별 중국의 수입 비중 변화>

(단위: 비중 %)



2. 미-중 1단계 무역합의 평가

-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2,000억 달러* 규모의 제품을 추가 수입하는 조건으로 미-중 양국이 1단계 무역 합의안에 정식 서명하면서 1년 반 동안 이어온 무역전쟁이 일단락(‘20.1)

* 합의 이후 2년간(2020~21년) 미국산 상품(공산품, 농산품, 에너지)과 서비스를 2017년 대비 각각 1,621억 달러, 379억 달러씩 추가 구매하여 대미 수입을 2,000억 달러만큼 늘리기로 약속

- 미국산 제품의 추가 구매 뿐만 아니라 ▲지재권 보호 ▲기술이전 강요 금지 ▲환율 조작 금지 ▲금융시장 개방 등을 약속하는 등 미국이 문제를 제기해왔던 부분에 대한 해결책 제시
- (1단계 합의 이행률) 무역합의 이행률은 2년간 63%에 그쳤으며, 이는 중국이 약속한 금액 중 절반 수준에서만 추가 구매가 이루어진 것을 의미
- 농산품은 이행률이 78%로 비교적 높았으나, 공산품과 에너지는 이행률이 각각 63%와 47%에 그침
- 무역합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책임을 둘러싸고 미-중 갈등은 오히려 격화되었으며,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전 세계 경기 침체, 무역 감소로 추가 구매를 이행이 어렵게 됨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이행 현황(중국 수입 기준)>

(단위: 억 달러)

품목		대미 수입 합의액		실제 이행 수입액		이행률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구매 확대 품목	1. 공산품	1,114	1,233	684	794	63.0%
	2. 농산품	366	436	236	389	78.0%
	3. 에너지	253	407	99	213	47.2%
	합계	1,733	2,076	1,019	1,395	63.4%

자료: 中 해관총서, ITC Trademap

- 미-중 1단계 합의 이행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며 양국간 갈등이 교착상태에 빠질 우려

- 미국이 낮은 이행률을 문제 삼으며 추가 제재조치를 취할 경우, 이미 높은 수준의 대중 관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며, 무엇보다 대부분의 중국산 품목에 대해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어 추가 제재 여지가 크지 않음
- 반대로 낮은 이행률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향후 중국에 대해서 취하는 조치들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등 대중 협상력 약화가 우려됨
-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중국이 1단계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평가하며, 기존 수단으로 중국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강조했으나, 중국에 페널티를 부과하거나 책임을 언급하지는 않음

2 미-중 무역전쟁 4년간 양국의 무역제재조치 및 영향 분석

1. 미국의 무역제재

<미국의 대중국 무역제재 주요 현황>

제재조치	내용
301조 대중 추가관세	·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 3,6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최대 25%의 추가관세 부과 · 비제재품목 대비 301조 제재품목의 대중국 수입이 크게 감소 · 4년 기한 경과 했으나, 미국 국내 산업계 반발 및 정치적인 이유로 해제가 쉽지 않음
수출통제리스트 (Entity List)	· 민감 품목 및 기술의 대중국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수출통제 대상 리스트 관리 · 화웨이 제재 등으로 인해 중국 반도체 산업 전반에 타격 발생 · 최근에는 수출통제 대상을 확대하여 비교적 저사양 반도체장비(14nm)도 수출까지 제재
통신장비 제재	· 법률 제정을 통해 중국산 통신장비 조달 금지, 중소 통신사 중국산 장비 대체 지원 · 미국 통신장비 수입에서 중국산 비중 크게 감소 · 다만 글로벌 시장에서는 여전히 화웨이, ZTE 등 중국산 장비가 높은 경쟁력 유지
전력장비 제재	· 핵심 국방시설에 중국산 장비 조달을 금지하는 트럼프 행정명령, 바이든 정부에서 해제 · 국방 시설 외에도 전력 설비의 전반적인 사이버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정책 지속 · 301조 관세, 전력업체의 안보위험 우려, 정부 규제 강화 등으로 대중 수입 비중 장기 하락세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 (UFLPA)	· 신장 위구르 지역 내 인권탄압 관련 제재가 2022년에는 무역분야까지 확장 · 시행 초기로 효과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태양광 모듈 설비가 美 세관에 다수 억류된 상황

자료: 연구자 정리

① 301조 대중 관세

□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에 대응하여 통상법 301조에 의거, 전체 대중 수입 중 3분의 2 이상(2018년 기준)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최대 25%의 추가관세 부과

○ 2018.7월 이후 총 4회에 걸쳐 3,6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부과

<미국의 대중국 301조 관세 부과 현황>

목록	관세 부과	품목 수	대중 수입액	추가관세	비고
1	2018.7.6.	818개	\$340억	25%	
2	2018.8.23.	279개	\$160억	25%	
3	2018.9.24.	5,745개	\$2,000억	10% → 25%	2019.5.10. 관세 인상
4A	2019.9.1.	3,243개	\$1,100억	15% → 7.5%	미-중 1단계 무역합의(2020.1.15.)로 관세 인하
4B	-	555개	\$1,600억	-	미-중 합의 진전으로 2019.12.15. 예정된 관세 철회

자료: USTR 공고 참조

- 미국 수입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제재 품목이 비제재 품목에 비해 감소세가 커 301조 제재효과가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
- 미국의 301조 제재 품목의 對세계 수입에서 對중국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18.0%에서 2021년 12.9%까지 5.1%p 감소
- 비제재 품목의 경우 중국의 비중이 2019년까지 감소하였으나,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감소 폭이 0.4%p에 그침

<미국의 301조 대상품목 대중국 수입 추이>

(단위: 억 달러, 비중 %)

		2017년(a)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b)	(b)-(a)
전체	금액	5,257	5,620	4,693	4,543	5,401	143
	비중	(21.9)	(21.6)	(18.3)	(18.9)	(18.4)	(-3.5)
제재 품목	금액	3,534	3,822	2,900	2,638	2,974	-560
	비중	(18.0)	(18.0)	(14.2)	(14.1)	(12.9)	(-5.1)
비제재 품목	금액	1,723	1,798	1,793	1,905	2,427	704
	비중	(39.4)	(37.4)	(34.7)	(36.2)	(39.0)	(-0.4)

자료: USTR 공고 및 USITC Dataweb를 참고하여 연구자 계산

주: '제재 품목'은 목록 1, 2, 3, 4A에 해당하는 품목을 총괄하며, '비제재 품목'은 목록 4B를 비롯해 추가관세 조치를 적용받지 않는 품목의 집합

- 2021년 바이든 정부 출범으로 301조 추가관세가 철회 또는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으나, 재편 없이 현재까지 지속 중
-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당시 301조 관세를 비판하기도 했으나 취임 후에는 대중 강경책을 이어가며 301조 조치도 유지
- 美 정부는 보조금을 받는 중국 기업을 상대로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되며, 향후 대중 협상의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
- 301조 조치의 4년 기한이 경과함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필요성 검토'를 진행 중이나, 국내산업의 반발 등으로 전면적인 철회는 쉽지 않을 전망
- USTR은 9/8일 관보¹⁾를 통해 301조 관세조치 연장 여부는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현행 추가관세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힘

1)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2/09/08/2022-19365/continuation-of-actions-chinas-acts-policies-and-practices-related-to-technology-transfer>

- 美 산업계가 총 400건²⁾이 넘는 연장 요청 의견을 제출했고,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이 301조 관세조치를 종료해 대중국 견제를 완화시킨다는 부담을 지려고 하지 않을 가능성
- 301조 조치는 중국의 불공정 행위,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등을 문제 삼고 있으나 중국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도 내재되어 있음
- 301조 제재에 앞서 중국의 불공정 관행을 조사한 USTR의 보고서(2018.3)³⁾에는 ‘중국제조 2025’라는 단어가 114번 등장하는 등 중국의 기술이전과 ‘중국제조 2025’ 정책의 연관성 강조
- 301조 관세 부과 공고에서 USTR은 ‘중국제조 2025’ 관련 품목을 제재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명시

② 수출통제리스트(Entity List)

- 일명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수출통제리스트(Entity List)는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미국의 안보에 위해가 되는 외국 기관(기업, 개인, 정부 등 포함)을 지정한 목록으로 해당 기관과의 거래를 규제
- 수출통제리스트에 등재된 기관에 민감 품목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BIS의 허가가 필요하며, ‘거부추정(Presumption of Denial)’에 따라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수출을 허가
- 2022년 9월 현재 수출통제 대상이 되는 중국 기업은 498개로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주요 제재 대상이 되고 있는 러시아(649개)에 이어 두번째로 많음
- 바이든 행정부에서 발표된 475건의 수출통제 중 중국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107건으로 대러 수출통제(275건)에 이어 두번째로 많음⁴⁾
 - 다만 대러 제재 275건 중 252건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취해진 조치
- 급증한 대중국 수출통제는 ‘중국제조 2025’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이 타겟
- 2018.10월 D램 제조업체 푸젠진화가 수출통제 리스트에 오르면서 중국의 미국산 반도체장비 조달에 차질이 발생
- 美 정부는 2019.5월 화웨이에 대한 수출통제를 단행한 후 지속적으로 제재의 수위를 높이며 화웨이의 반도체 사업을 견제

2) <https://www.reuters.com/business/biden-continues-look-options-china-tariffs-white-house-says-2022-07-05/>

3)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Section%20301%20FINAL.PDF>

4) <https://www.nytimes.com/2022/07/05/us/politics/us-china-export-controls.html>

- 화웨이와 함께 제재 대상에 오른 반도체 설계 기업(팹리스) 하이실리콘이 미국의 반도체 설계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특히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EDA는 사실상 미국이 독점하고 있어 상당한 타격으로 작용
- 화웨이는 자체적으로 설계한 반도체를 대만 TSMC를 비롯한 해외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로부터 조달받았으나, 2020년 5월 美 상무부는 수출통제 대상을 해외 생산 제품으로까지 확대
- 2020.8월에는 미국의 기술을 활용한 모든 반도체 제품의 조달을 금지하면서 미국과 미국 외 지역으로부터의 대화웨이 반도체 수출을 원천 차단(화웨이가 설계에 관여하지 않은 해외 생산 완제품 조달도 금지)

○ 2020년 12월 중국의 최대 파운드리 기업 SMIC에 반도체장비 수출 금지

<반도체 관련 미국의 대중 수출통제 일지>

일자	내용
2018.10.30.	푸젠진화, 수출통제리스트 등재 (83FR54519) - 중국 반도체공급의 핵심인 D램 제조업체 푸젠진화의 미국산 반도체장비 조달이 불가능해짐 - 당시 푸젠진화는 美 메모리반도체 기업 ‘마이크론(Micron)’과 기술도용 문제로 분쟁 중 - 국가 안보 보호를 위해 제정된 ‘수출통제’ 조치를 경제적인 목적으로 활용한 전례없는 사례 ⁵⁾
2019.5.16.	화웨이, 수출통제리스트 등재 (84FR22963) - 화웨이 본사 및 26개 지역에 위치한 68개 관계사 대상 - 반도체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화웨이 자회사 ‘하이실리콘(HiSilicon)’도 제재 대상에 포함
2019.8.19.	46개 화웨이 관계사, 수출통제리스트 추가 등재 (84FR43493)
2020.5.15.	수출 통제 범위의 확장 (85FR29849) - 화웨이(관계사 포함)로의 수출통제 대상이 미국 내 생산 제품에서 외국 생산 제품까지 확대 - 미국의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해외 위탁 생산품의 화웨이 수출 시 美 상무부 허가 필요
2020.8.17.	수출 통제 범위의 확장 (85FR51596) - 38개 화웨이 해외 관계사 추가 등재 - 2019년 5월 이후 90일마다 연장됐던 임시일반허가(Temporary General License) 종료 - 미국의 기술이 관여된 모든 경우에 대해 미국 국내외 생산 상관없이 화웨이로 수출 규제
2020.12.18.	SMIC를 비롯한 中 77개 사, 수출통제리스트 등재 (85FR83416) - 10나노 이하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기술, 장비의 수출 제한 - 화웨이 제재에 적용되는 외국 생산

자료: 美 관보, 기사 참조

□ 바이든 정부에서도 대중국 수출통제 조치가 다방면으로 이어지고 있음

○ 美 상무부는 SMIC에 대한 수출통제 기준을 10나노미터 이하의 미세공정을 적용하는 반도체장비에서 14나노미터 이하 장비로 범위를 확대하였음(*22.7)

* 숫자가 작을수록 공정이 미세하여 고성능 반도체 생산에 적합

5) <https://www.reuters.com/article/us-usa-trade-china-semiconductors-idUSKCN1N328E>

- 상무부는 램리서치와 KLA 등 주요 반도체장비 공급사에 공문(2022.7)을 보내 수출통제 조치를 강화 하였으며, 새롭게 발표될 규정에서 이러한 방침을 공식화할 전망이다⁶⁾
- 네덜란드 정부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며 네덜란드 ASML社가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요청
- 트럼프 정부부터 이어진 미국의 압력으로 네덜란드도 EUV 장비의 대중국 수출을 제한해왔으며, 2021.7월에도 바이든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수출 허가를 보류
- 美 상무부는 최근 네덜란드 정부를 상대로 구형 장비인 ‘심자외선(DUV) 노광장비’의 중국 판매를 금지하도록 로비를 벌이고 있음 (’22.5~6월 美 상무부 부장관 네덜란드 내방 당시)
- 그 외에도 인권탄압이나 중국군에 연계된 의혹이 있는 중국 기업들을 블랙리스트에 추가
- 미국이 보유한 핵심 기술, 장비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면서 제재 대상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음
- 2018.10월 수출통제 리스트에 등재 후 미국산 반도체 장비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푸젠진화의 D램 개발 프로젝트가 보류되었음
- 美 반도체 설계 기술에 대한 접근과 TSMC 등 파운드리로의 생산 위탁이 연달아 차단되면서 중국의 대표 반도체 설계(팹리스) 기업인 하이실리콘의 글로벌 모바일 AP(스마트폰용 CPU) 시장 점유율이 2020년 2분기 14%에서 2022년 2분기 0%까지 추락
 - * 모바일 AP 시장 하이실리콘 점유율(Counterpoint) : (’20.Q2)14% → (’20.Q3)13% → (’21.Q4)7% → (’21.Q1)5% → (’21.Q2)3% → (’21.Q3)2% → (’21.Q4)1% → (’22.Q1)1% → (’22.Q2)0%
- 화웨이는 반도체 외에도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와 5G 구현에 필요한 최신 모바일 AP칩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한때 애플을 추월해 2위에 올랐던 스마트폰 시장점유율 순위가 5위권 밖으로 밀려남
- 다만 수출통제리스트가 급격히 늘어난 것에 비해 규제의 실효성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승인율이 낮아지고는 있으나 2021년 상무부에 접수된 5,923건의 수출허가 신청 중 3,990건에서 승인이 이루어져 여전히 67%의 승인율을 기록
- 금액 기준으로는 5,449억 달러 중 2,294억 달러의 수출이 승인을 받았으며, 승인율은 42%를 기록해 전년도 27%에 비해 증가

6)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2-09-12/biden-to-formalize-curbs-on-chip-exports-to-china-reuters-says>

<美 상무부 대중국 수출허가 추이>

	건수 기준					금액 기준 (십억 달러)				
	총계 (a)	승인 (b)	거부	미처리	승인율 (b)/(a)	총계 (a)	승인 (b)	거부	미처리	승인율 (b)/(a)
2017년	3,500	2,888	73	539	82.5%	16.2	15.8	0.02	0.4	97.4%
2018년	3,536	2,883	77	576	81.5%	3.5	2.5	0.1	0.9	71.4%
2019년	3,409	2,666	130	613	78.2%	6.8	4.4	0.1	2.3	64.7%
2020년	3,747	2,645	177	925	70.6%	106.1	29.1	0.5	76.5	27.4%
2021년	5,923	3,990	526	1,407	67.4%	544.9	229.4	291.1	24.4	42.1%

자료: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US Commerce BIS)

주1: 미처리(RWA, Return Without Action)는 수출허가 신청자가 산업안보국(BIS)의 추가 정보 요청에 응하지 않을 때 취해지는 조치

주2: 대중국 수출규제 강화와 함께 제재 대상이 늘어나면서 총 신청 건도 동반 상승

주3: 수출통제리스트(Entity List)뿐만 아니라 군사 최종 소비자(Military End User), 일부 금지 국가들에 수출할 때에도 수출허가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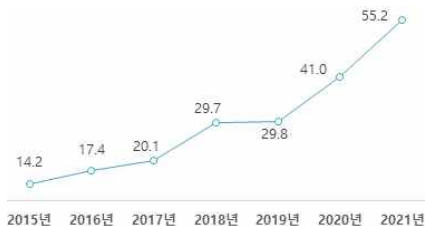
□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장비 수출은 2019년 화웨이 제재 이후로 오히려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

○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장비 수출은 2019년 29.8억 달러에서 2020년 41.0억 달러, 2021년 55.2억 달러로 화웨이 제재(2019.5) 이후 증가율이 30%를 크게 웃돌고 있음

- 다만 2022년 상반기 수출은 22.5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도 상반기(26.3억 달러) 대비 14.5% 감소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장비 수출 추이>

(단위: 억 달러, 증감률 %)



	2019년	2020년	2021년	2021년 상	2022년 상
수출액	29.8	41.0	55.2	26.3	22.5
증감률	0.6	37.5	34.6	50.8	-14.5

자료: USITC Dataweb

주: 반도체장비는 HS 848620을 대상으로 함. 증감률은 전년동기비 기준 계산

○ 대중 반도체장비 수출은 저사양 위주이나, 자동차 반도체 부족 사태에서 경험했듯 범용 제품이라도 지나치게 높은 대중국 의존도는 향후 공급망 쇼크 시 문제가 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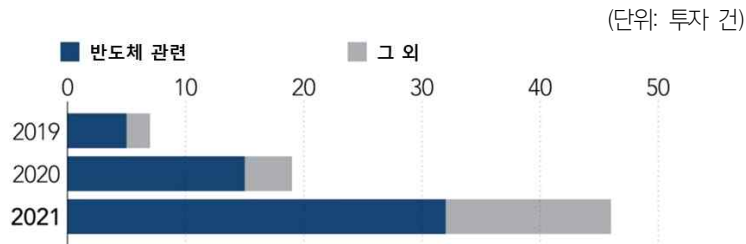
□ 수출통제리스트의 제재 대상에서 빚겨간 중국 기업들을 중심으로 반도체 기술 발전이 지속

○ 청화유니그룹* 자회사 YMTC는 2021년 낸드플래시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5%대의 6강으로 자리매김⁷⁾

* 시진핑 정권 반도체 굴기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시진핑 주석의 모교인 칭화대가 51%의 지분 보유

- 中 국영반도체 기업 창신메모리는 2019년 3분기부터 D램 양산을 시작했으며, 2020년에는 중국산 제품에 다수 사용되고 있음⁷⁾
- 비교적 큰 타격을 받지 않은 SMIC의 경우 최근 7나노 반도체 생산에 성공했다고 발표
- 화웨이는 미국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설계부터 생산까지 자체 공급망 구축 방안 모색 중
- 미국의 제재 이후 화웨이는 기술혁신을 위해 투자를 크게 늘리고 있으며, 테크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 총 45건 이상의 투자를 진행했으며, 이 중 70%가 반도체 관련
 -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반도체 생산장비, 반도체 소재 등 반도체 전 공정에 걸쳐 투자

<화웨이 기술 투자 현황>



자료: Qichacha (Nikkei Asia 재인용)

- 화웨이의 노력이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려우나, 자체 공급망을 갖추게 된다면 미국의 반도체 패권에 위협이 될 수 있음

③ 중국산 통신장비 제재 조치

- 통신장비에 대한 우려와 견제 필요성은 일찍부터 제기되어 왔으며, 트럼프 정부에서 제재가 시작된 이후 2021년 말에는 중국 통신장비의 승인을 금지하기에 이름
- 2012년 美 하원은 중국산 통신장비의 안보위협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정부 조달에서 중국산 장비를 배제할 것을 권고
- 초당적인 지지 하에 美 의회는 정부기관의 중국산 통신장비 조달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국방수권법, '18.8)
- 2021.11월 제정된 '보안장비법'은 화웨이 및 ZTE의 통신장비에 대한 승인을 금지하면서 사실상 중국산 통신장비의 수입을 금지

7) <https://www.ft.com/content/8fc3224a-7fe9-410b-aeb8-0c308a37fb3e>

8) <https://www.thelec.kr/news/articleView.html?idxno=15784>

<통신장비 관련 대중 수출통제 일지>

일자	내용
2012.10.8.	美 하원 정보위원회, '중국 통신사 화웨이, ZTE가 미국 국가 안보에 제기한 이슈 조사 보고서' 발표 - 중국 정부의 통제, 자재권 침해 등을 지적하며 화웨이, ZTE의 안보 위협 제기 - 美 정부 조달 시 상기 통신사 배제 권고, 민간 분야도 관련 리스크 인지 촉구
2018.8.13.	'2019년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NDAA) 2019)* 제정 - 美 정부의 중국산 통신장비 사용 금지 : 화웨이, ZTE 통신장비 구매에 연방재원 활용 금지
2020.3.12.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신 네트워크법(Secure and Trusted Communications Networks Act)' 제정 - 美 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에 국가 안보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가한 통신장비 공급자를 선정 및 '안보위협 리스트(Covered List)' 작성을 지시 - 美 중소 통신사의 중국산 통신장비 교체를 지원하는 '환급 프로그램' 신설 지시
2020.12.27.	'2021년 통합세출법(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21)** 제정 - 중국산 장비의 교체를 지원하는 '환급 프로그램' 집행을 위한 19억 달러 자금 마련
2021.3.12.	美 통신위원회(FCC), 중국 통신장비 등 5개사 '안보위협 리스트'에 등재 - 화웨이, ZTE, 하이테라, 항저우 하이커버전, 다화기술
2021.11.11	'보안장비법(Secure Equipment Act)' 제정 - 통신위원회(FCC)가 '안보위협 리스트'로 분류된 회사의 제품 승인을 금지

자료: 美 관보, 기사 참조

주: 국방수권법은 미국의 국방 정책과 예산을 총괄하는 법률로 지난 60년간 美 의회에서 매년 제정되었으며, 통합세출법은 연방정부에 예산을 조달하기 위한 여러 지출 법안을 통합하여 처리하는 법안임

- 대형 통신사들과 달리 비용 부담으로 인해 중국산 장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중소 지역 통신사를 대상으로 장비 교체 비용 지원
- 의회는 중국산 장비 교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하고(안전네트워크법, '20.3) 19억 달러에 이르는 예산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통합세출법, '20.12) 제정
- 미국 통신위원회는 기존에 설치된 중국산 장비를 대체하기 위해 'Rip and Replace' 프로그램을 운영 중으로, '22.1월까지 총 181건이 신청됨
- 중국산 장비를 교체하는 데 약 56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는 예측에 따라 '환급 프로그램' 사업 완수를 위해 예산 추가가 필요한 상황
- 미국의 통신장비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감소하며 2022년 상반기에는 베트남에 추월
- 2018년 한 때 중국산 장비의 비중이 50%에 육박하였으나 2022년 상반기에는 20% 이하로 하락
- 베트남으로부터의 수입은 2017년 1.9%에서 2022년 상반기 20.6%로 매년 높은 증가세를 이어옴

* 삼성전자를 비롯한 한국의 통신장비 업체가 베트남에서 장비를 생산 중

<미국의 국가별 통신장비 수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비중 %)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1년 上	2022년 上
베트남	910 (1.9)	1,417 (3.0)	3,051 (7.8)	4,959 (12.7)	7,339 (17.0)	3,065 (15.5)	4,719 (20.6)
중국	23,208 (48.2)	23,897 (49.9)	16,577 (42.3)	12,047 (30.8)	10,386 (24.1)	4,691 (23.7)	4,438 (19.4)
멕시코	9,530 (19.8)	9,103 (19.0)	6,730 (17.2)	6,693 (17.1)	7,286 (16.9)	3,695 (18.6)	3,776 (16.5)
대만	1,614 (3.4)	1,704 (3.6)	3,316 (8.5)	4,300 (11.0)	4,518 (10.5)	2,046 (10.3)	2,668 (11.7)
태국	3,134 (6.5)	2,605 (5.4)	2,090 (5.3)	2,882 (7.4)	3,340 (7.7)	1,575 (7.9)	1,897 (8.3)

자료: USITC Dataweb

주: 통신장비는 HS 851762를 대상으로 함

□ 미국 네트워크 시장에서 국내 통신장비 업체가 일부 반사이익을 얻고 있음

○ 삼성전자는 `20.9월 미국 1위 통신사업자인 버라이즌에 66.4억 달러(약 8조원) 규모의 5G 통신장비를 납품하기로 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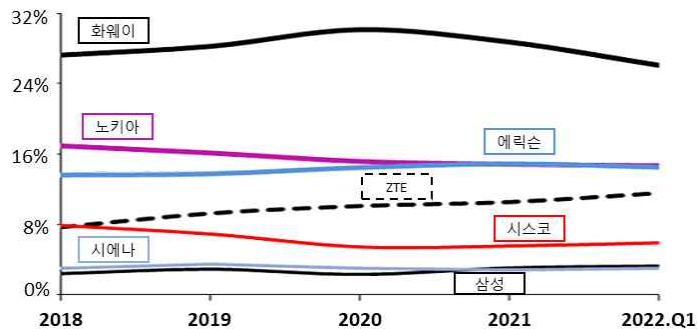
□ 미국 시장에서는 약화됐으나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산 통신장비는 여전히 막강한 경쟁력을 유지

○ 5G 통신용 반도체 조달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화웨이의 점유율이 2020년부터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여전히 노키아, 에릭슨에 비해서는 높은 점유율 유지

○ ZTE의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어 화웨이 점유율 하락분을 상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ZTE는 2016년 미국의 수출통제리스트(Entity List)에 올랐으나 고액의 벌금을 납부하고 경영진을 교체하는 조건으로 리스트에서 해제되었으며, 반도체 부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웨이와 달리 부품 조달에 규제를 받지 않고 있음

<글로벌 통신장비 점유율 추이>



자료: 델로로(Dell'oro)

④ 중국산 전력장비 제재 조치

<통신장비 관련 대중 수출통제 일지>

일자	내용
2020.5.1.	트럼프 대통령, 대규모 전력시스템(Bulk Power System) 보안에 관한 행정명령 (EO 13920) - 적성국(Foreign Adversary)으로부터 안보 위협을 수반한 전력장비 조달 금지 - 다만, 구체적으로 적성국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음
2020.5.11.	美 상무부, 변압기 관련 232조 조사 개시
2020.7.8.	美 에너지부, 대규모 전력시스템 보안에 관한 정보 요청 명령 (85FR41023) - 5월 행정명령의 후속조치로 에너지 업계를 대상으로 '정보 요청(Request for Information)' - 행정명령에서 언급한 적성국으로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6개국 명시
2021.1.16.	美 에너지부, 대규모 전력시스템 중국산 전력장비 조달 금지 명령 (86FR533) - 핵심 국방시설(Critical Defense Facilities, CDF)에 중국산 전력장비 인수·수입·이전·설치 금지 - 전력공급사, '21.3/17 기한으로 금지된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증명서 제출 의무
2021.1.20.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행정명령('20.5/1) 90일 유예 등에 관한 행정명령 (EO 13990) - 중국산 장비 조달을 금지하는 에너지부 조치('21.1/16)도 유예
2021.4.20.	美 에너지부, 중국산 전력장비 조달 금지 명령('21.1/16) 철회 (86FR21308) 美 에너지부, 전력망 사이버보안 위협 해결을 위한 100일 계획 발표 - 전력 설비의 사이버 보안 위협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기술 및 시스템 개발 노력
2021.7.29.	美 상무부, 변압기 관련 232조 조사 보고서 발표 -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판단 하에 변압기 및 부품에 관세부과 등 품목별 권고사항 제시 - 권고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는 않았음
2022.8.17.	美 에너지부, 전력망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4,500만 달러 지원

자료: 美 관보, 기사 참조

□ 전력망 안보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면서 중국산 전력장비에 대한 위기의식 고조

○ 美 정부는 중국이 전력시설을 비롯한 산업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중국의 해킹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해왔으며, 미국 내에서 중국 장비에 대한 백도어 우려가 제기되었음

* 2015.12월 우크라이나 전력망을 대상으로 한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주민 23만 명의 전력과 상수도 공급이 중단된 전례가 있음

□ 트럼프 정부는 행정명령 등을 통해 중국산 전력장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이어감

○ 적성국으로부터 전력장비 조달을 금지한 `20.5월 행정명령에 의거하여 美 에너지부는 트럼프 대통령 퇴임 직전인 `21.1월 핵심 국방시설에 중국산 장비 조달을 금지시킴

○ 핵심 전력장비인 변압기를 대상으로 232조 조사를 개시하기도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232조 관세는 부과하지 않음

- 다만 변압기는 대중 301조 관세부과 대상으로 2018년부터 25%에 이르는 고율의 관세를 적용

- 바이든 정부는 전 정권의 중국산 장비 조달 금지 명령을 철회했으나, 국방시설 외에도 전력설비의 전반적인 사이버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대중 견제를 지속
- 美 에너지부는 해킹 위험 감지 능력 제고, 정부기관과의 공조 등을 강조하는 전력망 100일 계획을 발표했으며(‘21.4), 전력망 보안강화를 위해 4,500만 달러의 지원 발표(‘22.8)
- 안보위협 우려, 중국산 장비에 대한 규제 강화, 301조 관세 등의 영향으로 미국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4년 이후 하락세 지속
- 중국산 장비 수입이 급격히 늘어나 2014년 대중국 수입 비중이 7%에 이르렀으나 이후 우크라이나 사태와 백도어 문제 등 중국산 장비 조달에 따른 부담이 커지면서 중국 비중 감소
- 2018년 301조 조치 등의 영향으로 중국산 비중의 하락세가 지속되었으며 2021년에는 1%까지 하락

<미국의 대중국 고압변압기 수입 추이>



자료: USITC Dataweb

주: HTS 8504230080 기준으로 100,000KVA 이상의 고압변압기를 대상으로 집계

⑤ ‘위구르 강제노동금지법(UFLPA)’ 신장산 제품 수입 금지

- 미국은 중국의 신장 지역 인권탄압과 관련된 제재를 지속해왔고, 2022년에는 수입제한조치로까지 확장
- 2020.6월 ‘위구르 인권정책법’을 제정하여 인권 탄압에 관련한 중국 당국자에 대해 자산동결, 비자취소, 미국 입국금지 등을 통한 제재를 시행
- 2022.6월에는 ‘위구르 강제노동금지법’이 발효되어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함
- UFLPA는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지 않는 한 신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강제노동이 동원된 것으로 간주하여 원칙적으로 수입을 금지하는 강력한 조치
- 강제노동과 관련되지 않았다는 입증책임을 美 관세당국이 아닌 수입자가 지고 있어 대중 수입의 부담이 큼

○ 미국의 대중국 301조 관세 부과 시점에 맞춰 중국도 대미 보복관세를 부과

- 중국의 대미 수입액은 1,500억 달러(2017년 기준)로 미국의 대중국 수입보다 적어 제재의 규모 측면에서 본다면 작아보일 수 있음

<미-중 간 추가관세 부과 경과>

	미국 → 중국			중국 → 미국		
	시기	규모	추가관세	시기	규모	추가관세
232조	2018.3.8.	\$290억 (철강제품)	25%	2018.4.2.	\$30억	15~25%
	2018.3.8.	\$170억 (알루미늄)	10%			
301조	2018.7.6.	\$340억	25%	2018.7.6.	\$340억	25%
	2018.8.23.	\$160억	25%	2018.8.23.	\$160억	25%
	2018.9.24.	\$2,000억	10%→25%	2018.9.24.	\$600억	5~10%→5~25%
	2019.9.1.	\$1,100억	15%→7.5%	2019.9.1.	\$300억	5~10%

자료: USTR, 中 해관총서 <https://crsreports.congress.gov/product/pdf/IN/IN10874/6>

- 상호 추가관세 등의 영향으로 미-중 무역전쟁 이전과 대비하여 중국의 수입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
- 특히 제재품목에서 대미 수입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이후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이행 과정에서 다시 비중 증가
 - 1단계 합의 주요 품목인 대두, 천연가스, 원유의 대미 수입이 크게 늘어난 영향
- 비제재품목은 추가관세 부과가 없었음에도 무역전쟁 이전인 2017년 8.4%에서 2021년 5.7%까지 미국의 비중 감소

<中 보복관세 대상품목 대미 수입 추이>

(단위: 억 달러, 비중 %)

		2017년(a)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b)	(b)-(a)
전체	금액	1,544	1,560	1,238	1,363	1,810	265
	비중	(8.4)	(7.3)	(6.0)	(6.6)	(6.8)	(-1.6)
제재 품목	금액	1,092	1,029	785	936	1,293	201
	비중	(8.4)	(6.8)	(5.4)	(6.8)	(7.3)	(-1.0)
비제재 품목	금액	452	531	452	428	516	64
	비중	(8.4)	(8.4)	(7.3)	(6.3)	(5.7)	(-2.8)

자료: 中 해관총서, ITC Trademap

② 외국 조치 대항 입법

□ 중국은 규정 및 법률 제정을 통해 미국의 제재조치에 대항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 마련

- ‘신뢰할 수 없는 기업명단에 관한 규정’은 미국의 수출통제리스트(Entity List)에 대한 맞대응 조치로서, 미국의 수출통제법 개정에 대응해 중국도 수출통제의 포괄적 근거가 되는 법적장치를 마련
- ‘외국법률의 역외적용 저지’는 서방, 특히 미국의 제재가 미치는 타격을 저지하고 반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중국 기업 및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
- 상무부에서 발표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2021.6월 상위법 차원에서 ‘반외국제재법’을 제정
 - 중국은 ‘반외국제재법’ 입법 이전에도 홍콩, 신장위구르 등과 연관된 해외 기업 및 개인을 상대로 제재조치를 가해왔으며, 동법은 기존 조치에 대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 특징적

<중국의 대항 입법 경과>

일자	내용
2020.9.16.	中 상무부,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에 관한 규정’ 발표 - 일명 ‘중국의 블랙리스트’로 미국의 ‘수출통제리스트(Entity List)’에 대한 맞대응 조치 - 중국의 주권과 안보를 해치는 기업 리스트를 작성하여 이들의 대중국 무역 및 투자를 제한
2020.12.1	中 상무부, ‘수출통제법’ 발효 - 화웨이 제재 등 美 수출통제법에 대항해 민감품목 및 기술이 중국 외부로 이전되는 것을 통제 - 수출통제 대상 품목 수출 시, 최종사용자와 최종용도를 증명하여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함 - 그간 수출통제와 관련해 산재해 있는 각종 규정들을 통합하여 포괄적인 법률 제정
2021.1.9.	中 상무부, ‘외국법률-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 저지 방법’ 발표 - 외국법의 중국 내 역외적용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의 대중국 제재 대응 목적 - 역외적용으로 발생한 피해와 관련해 신고, 손해배상 기준을 구체화
2021.6.10.	최고입법기구 전국인민대표대회, ‘반외국제재법’ 통과·시행 - 상위법 차원에서 외국의 제재에 반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제공 - 중국에 차별적인 조치를 행한 주체의 입국제한, 자산동결, 거래제한 및 기타조치

자료: 기사 등 참조

□ 중국은 실질적인 효과가 크지 않은 수준에서 맞대응 방식을 취하며 갈등상황의 고조를 회피중

- 현재까지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에 지목된 사례는 없음
- ‘반외국제재법’에 따른 제재 조치가 현재까지 총 4건 이루어졌으나,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음
 - ‘홍콩 내정간섭’과 ‘신장위구르 제재 맞대응’, ‘펠로시 대만 방문’ 등에 대한 제재는 개인을 대상으로 입국금지, 자산동결 등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양국 무역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음
 - 대만에 대한 무기 공급을 문제삼으며 록히드마틴과 레이시언 테크놀로지 등 미국 군수기업을 제재 명단에 올렸으나, 이들 기업은 중국과의 거래가 미미하여 사실상 제재 효과가 없음

<‘반외국제재법’에 따른 조치 현황>

일자	제재 행위	대상	조치
2021.7.23.	홍콩 내정간섭에 따른 제재	美 전 상무부 장관 월버 로스 등 7명	- 중국 진입 금지(홍콩, 마카오 포함), 중국 내 자산 동결, 중국 기관과의 거래 금지 등 - ‘반외국제재법’의 최초 적용 사례
2021.12.21.	미국의 신장위구르 제재에 대한 맞대응	국제종교자유위원회* 소속 4명의 미국인	- ‘21.12/10 美 정부는 신장위구르 인권탄압과 연관된 신장 자치구 잔현직 공무원 4명 제재 - 중국 진입 금지(홍콩, 마카오 포함), 중국 내 자산 동결, 중국 기관과의 거래 금지 등
2022.2.21.	대만에 무기를 판매한 행위 제재	록히드마틴, 레이시언 테크놀로지 (군수기업)	- 구체적인 제재 내용 밝히지 않음 - 중국과의 거래가 군수물자 거래가 미미한 탓에 실질적인 제재 효과는 적음
2022.8.5.	미국 서열 3위 펠로시 하원의장 대만 방문에 대한 제재	펠로시 및 직계 친족	- 펠로시 및 직계 친족을 제재 대상에 등재 - 中 관영매체, ‘펠로시 일가와 거래하는 기업’은 중국 사업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

자료: 기사 등 참조

주: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 United State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미국 정부 산하 초당적인 독립기구로 국제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종교의 자유 침해 상황을 조사해 정부와 의회에 정책 제안

□ 중국은 법률에 근거한 제재 보다 불매운동이나 비관세장벽 등을 통한 기존의 제재방식을 되풀이

○ 2021.3월 신장 목화에 대해 미국과 EU가 강제노동을 문제 삼으며 중국 관료를 제재하자 중국은 H&M, 나이키, 아디다스 등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불매운동을 통한 경제보복에 나섬

- 나이키와 아디다스는 중국 내 점유율이 각각 25%, 15% 수준을 유지하며 1, 2위 자리를 굳건히 지켜왔으나 신장 목화 사건 이후 매출이 급격히 하락해 2021년 중국 토종브랜드가 처음으로 아디다스를 제치고 2위 탈환

○ 펠로시 대만 방문에 대응한 수입 제한 조치에서 중국은 검역 등 비관세조치를 활용

- 中 해관총서는 펠로시 방문 이후 대만 감귤류 과일과 냉장 갈치, 냉동 전갱이 수입을 중단('22.8.3) 한다고 공지하며 그 근거로 유해생물 및 잔류물 검출, 코로나19 양성 반응 등을 제시

-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미국산 소고기 수입 중단('22.8.11)도 검역 문제를 사유로 제시

□ 이외에 구매력을 무기로 사용할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미국을 압박

○ 중국 국영항공사(에어차이나, 남방항공, 동방항공)는 항공기 구매계약에서 미국의 보잉을 배제하고 EU 에어버스를 대량 구매

○ 수출통제법 제정과 함께 희토류 수출 제한에 대한 우려에도 수출 제한 조치가 취해진 사례는 없으나, 중국 내 희토류 관련 3개 기업을 합병해 거대 국영기업을 설립

3 양국의 공급망 재편 노력

1. 미국의 공급망 재편 정책

<美 국방부, 중국산 원자재 사용을 이유로 록히드마틴社 F-35 스텔스 전투기 인수 중단('22.9)>

- 전투기 터보머신에 사용된 자석 생산시 5차 벤더로부터 조달한 중국산 합금이 문제가 됨
- 국방부는 전투기 성능과 안전, 보안과 무관한 이슈라고 밝혔으나, 록히드마틴은 중국산 부품을 대체하기로 결정

<美 의원, 중국산 메모리반도체 사용과 관련해 “애플, 불안난치고 있어”라며 경고('22.9)>

- 애플社가 중국 국영기업 YMTC로부터 낸드플래시 메모리반도체 조달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보도에 반발
- 마크 루비오(공화) 상원의원은 애플이 YMTC와 거래할 경우 전례 없는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 경고
- 마이크 매콜(공화) 상원의원은 애플이 중국 공산당에 조력하는 것이라 주장했으며,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이와 관련해 비공식적으로 美 상무부에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

- 최근 미국 정부와 의회가 중국산 부품 사용을 문제 삼으며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공급망 디커플링이 심화될 가능성
- (배경) 코로나 여파로 생필품과 마스크를 비롯한 의료용품의 수급 차질을 겪으면서 공급망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
- (정책변화) 코로나 팬데믹 와중에 바이든 정부가 등장하며 미국의 통상정책은 대중 무역적자 해소에 서 공급망 안정성 제고가 핵심 과제로 대두
 -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한 달 만에 행정명령을 발동하여 핵심 품목에서 공급망 리스크 점검을 지시
- (대응방안)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의료용품 등 4대 핵심 품목 공급망 점검 보고서에서 1)미국 내 생산기반 마련과 2)동맹국과의 공조를 주요 방안으로 제시

① 리쇼어링 : 미국 내 생산기반 마련

-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글로벌 주요 기업의 대미 투자를 유인하는 등 정부가 주도적으로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에 나서고 있음
- 미국은 생산 측면에서 과도하게 중국에 의존하던 것에서 벗어나, 자국 공급망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줄이고자 노력
- 美 의회에서도 중국 견제와 미국 내 첨단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관련 법안을 종합한 대중국 패키지 법안이 발의
- 대중국 패키지 법안의 시초로 美 상원이 발의한 미국혁신경쟁법안(USICA)이 '21.6월 상원을 통과했으며, 유사한 취지의 미국경쟁법안(US COMPETES Act)이 '22.2월 별도로 하원을 통과

- 상원의 USICA와 하원의 US COMPETES Act는 조정 과정에서 차이를 좁히지 못하였으나, 이후 '반도체와 과학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각각 8월과 9월 통과되며 중국 견제를 위한 법적인 근거 마련
- **(반도체와 과학법, CHIPS and Science Act)** 대중국 패키지 법안 중 가장 핵심이 되는 반도체 지원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양원 통과 후 대통령 서명을 거쳐 '22.8월 제정
 - *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800억 달러(약365조원) 규모의 연방 재정 투자 법안으로, 제조 시설 건설과 R&D 역량 확충을 지원
- 우리나라를 비롯한 해외 반도체 기업도 미국 내 반도체 설비 투자와 관련한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어 미국 내 투자를 촉진할 전망
 - 오하이오 주에 신규 투자를 결정한 미국의 인텔 뿐만 아니라 텍사스(\$170억)와 애리조나(\$120억)에 투자 예정인 삼성전자(한국)와 TSMC(대만)도 수혜 예상
- 동법에 따라 美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에 대해 향후 10년간 중국에 최첨단 반도체(28나노미터 미만) 투자를 금지하는 '가드레일 조항'을 담고 있어 중국 반도체 산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 현재 중국은 미국의 수출통제에 따라 최첨단 반도체 설비를 조달받지 못하고 있어 중국 내 생산되는 반도체는 범용 제품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
 - 반도체장비 수출 통제와 더불어 투자 제한 조치까지 더해져 향후 중국 반도체 기술의 첨단화 목표에 어려움 가중
-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전기차 세액공제' 정책을 통해 중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전기차 및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추진
 - *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 전 국민 건강보험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전부터 추진해온 대규모 지출 법안인 '더 나은 재건(BBB, Build Back Better)법'을 수정·축소한 버전

<IRA법 상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생산요건>

대상	세액공제	요건	요구비율(%)						
			'23	'24	'25	'26	'27	'28	'29
핵심광물 (니켈, 리튬 등)	\$3,750	①미국 ②미국의 FTA 체결국 ③북미에서 재활용 중 17가지에서 조달	40	50	60	70	80	80	80
배터리 부품 (양극재, 음극재 등)	\$3,750	북미 제조·조립	50	60	60	70	80	90	100

자료: '인플레이션 감축 법(Inflation Reduction Act)' 전문 및 관련 기사

주: '요주의 외국기업'이 채굴·가공·재활용한 핵심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는 2025년부터, '요주의 외국기업'이 조립·제조한 배터리 부품을 사용한 전기차는 2024년부터 세액공제 제외

- 북미 지역에서 조립·생산된 전기차를 한정으로 \$7,500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등 전기차 생산 공급망을 미국 역내로 이전시키기 위한 의도가 담겨있음
-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요주의 외국기업’에 대한 명시적 언급은 없으나 사실상 중국을 겨냥하고 있어 글로벌 전기차배터리 공급망의 탈중국화를 추진
- **(희토류 공급망 재편)** 대중국 경쟁력 하락 및 환경오염 등의 문제로 2000년대 미국의 희토류 채굴·생산이 중단되었으나, 높은 대중국 의존도 탈피를 위해 정부가 생산시설 확보에 나서고 있음
- 美 국방부는 미국 유일의 희토류 생산업체인 MP 머티리얼스와 호주에 본사를 둔 글로벌 희토류 기업 라이너스에 보조금을 제공하여 텍사스 지역 내 희토류 생산시설 확충을 지원
 - MP 머티리얼스는 미국 내 유일하게 운영 중인 희토류 광산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정부 지원 하에 희토류 처리 시설 구축 중
 - 호주 라이너스는 美 화학기업 ‘블루라인’과 합작해 텍사스에 희토류 공장을 설립하고 있으며, 중희토류 생산설비가 2025년 가동될 것으로 예상¹¹⁾ (현재 중희토류 정제시설은 중국만 보유)

<美 국방부 희토류 설비 자금 지원 내역>

수혜기업	일자	금액	세부내용
MP 머티리얼스 (MP Materials)	2020.11	960만 달러	- 경희토류(Light Rare Earth Elements) 처리 시설 관련 - MP 머티리얼스는 미국 유일의 희토류 광산을 소유한 기업
	2022.2	3,500만 달러	- 중희토류(Heavy Rare Earth Elements) 처리 시설 관련
라이너스 (Lynas Rare Earths)	2020.7	미발표	- 호주 기업으로 중국을 제외하고 희토류 생산 세계 최대 규모
	2021.2	3,040만 달러	- 경희토류(Light Rare Earth Elements) 처리 시설 관련
	2022.6	1억 2,000만 달러	- 중희토류(Heavy Rare Earth Elements) 분리 시설 관련
TDA 마그네틱스 (TDA Magnetics)	2020.11	230만 달러	- 희토류 자석 공급망 연구 관련
노베온 마그네틱스 (Noveon Magnetics) (舊Urban Mining Company)	2020.7	2,880만 달러	- 네오디뮴 희토류 자석 미국 내 생산지 개발 지원
	2020.11	86만 달러	- 희토류 자석 공급망 연구 관련

자료: 관련 기사 참조

- **(글로벌 기업 투자 유치)** 바이든 대통령은 글로벌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직·간접적으로 대미 투자 확대를 요구
- 2021.4월 美 국가안보보좌관이 주재하고 삼성전자와 TSMC, 인텔 등이 참석한 반도체 화상회의에 바이든 대통령도 참석해 반도체 기업의 대미 투자를 압박

11) <https://www.ft.com/content/5a974ea5-c863-406f-bab1-3cc6fe8d6ad2>

- TSMC는 120억 달러의 반도체 공장 착공('21.6)에 들어갔으며, 美 인텔도 200억 달러('21.3)와 1,000억 달러('22.1) 규모의 투자 계획을 차례로 발표했고, 뒤이어 삼성전자도 170억 달러의 신규 반도체 설비 확충을 선언('21.11)
- 바이든 대통령은 2022.5월 방한하여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가장 먼저 찾았으며, 현대차 회장과 면담을 가지는 등 직·간접적으로 세일즈 외교에 힘쓰며 대미 투자 촉진
- 현대차그룹은 50억 달러 추가 투자를 결정하여 총 105억 달러 규모의 전기차·배터리 공장을 설립하기로 결정

② 프렌즈쇼어링 : 동맹 및 파트너 중심의 공급망 구축

- 미국은 공급망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 내 생산시설 확충과 함께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공급망 협력을 강조
- 동맹 및 파트너 규합을 통해 대중국 연합전선을 형성하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 비중을 축소하고자 함
-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인도태평양 지역 내 중국의 영향력 확장을 견제하는 한편,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및 신통상 규범 주도를 위해 2022.5월 새로운 형태의 경제협약체 논의를 시작
- 경제협력을 표방하고 있으나, 한국, 일본, 아세안 10개국, 인도, 대양주 국가 등 인도양-태평양 역내 중국의 주요 주변국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어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내포
- IPEF 참여국 간 디지털, 환경, 기술 등의 표준 정립 시 중국의 상품 및 서비스가 배제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IPEF는 관세 인하와 같은 확실한 인센티브가 없는 만큼 구속력을 담보하기 어려워 미국이 의도한 효과가 나타날 지는 불확실
- **(대중국 공급망 동맹)**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품목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동맹 및 파트너를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
- **(Chip4 동맹)** 미국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의 비중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를 갖고, 2022.3월 한국, 일본, 대만을 대상으로 'Chip4 동맹' 결성을 제안
 - 반도체 설계 기술 및 톨을 보유한 미국이 메모리 분야의 한국, 파운드리 대만, 소재·부품·장비의 일본을 아울러 중국에 대항할 반도체 장벽을 구축한다는 의도
-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MSP)** 희토류 등 핵심광물 공급망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줄이고 광물 조달의 안정성 제고를 목표로 한국, 일본, 캐나다, 호주, EU집행위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이니셔티브 출범

2. 중국의 공급망 정책

- **(쌍순환 전략)** 미-중 갈등 상황에서 2020년 시진핑 정권이 제시한 경제전략으로 궁극적으로 중국 경제의 자급자족을 실현하고자 함
 - * 국내 대순환을 위주로 국내외 쌍순환이 상호 촉진되도록 하는 전략으로, 해외 시장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내수 시장의 발전을 추진해 수출과 함께 내수를 경제 성장의 중심 축으로 삼겠다는 의도가 담겨있음
- 대외 여건 변화와 함께 중국이 그간 유지해온 수출 주도의 성장정책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면서 내수 중심으로 성장전략으로 전환
 - 쌍순환은 표면적으로 국내순환(내수)과 국제순환(수출)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으나, 경제정책의 방점이 수출에서 내수로 이동한 것이 핵심
- 쌍순환 전략이 대외 불확실성의 차단 및 경제적 자립 강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향후 중국의 공급망 수직계열화 시도를 배제할 수 없음
 - 원자재에서 부품, 기술, 생산까지 공급망 전 과정을 내재화할 경우 높은 수준의 안정성 확보가 가능
- **(중국제조 2025 + 일대일로)** 시진핑 정권의 대표적인 경제발전 전략이나 중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으로 해석 가능
 - ‘중국제조 2025’는 핵심부품과 소재의 자급률을 2020년에는 40%, 2025년에는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대규모 변화를 전제로 함
 - 대표적인 핵심부품인 반도체에서 중국이 70%의 자급률을 달성한다는 것은 한국과 대만으로부터 중국으로 반도체 생산기지가 이전된다는 것을 의미
 - 중국은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 아프리카와 남미 등에 적극 진출하였으며, 경제적인 영향력을 바탕으로 핵심광물 등 자원 선점
 - 콩고는 전 세계 코발트 생산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콩고 광산의 80% 이상을 중국 기업이 소유¹²⁾
 - 칠레, 볼리비아, 아르헨티나에 걸친 이른바 ‘리튬 삼각지대’의 리튬 매장량은 전 세계 절반을 넘고 있어 일찍부터 중국이 공을 들이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2022.2월 아르헨티나가 일대일로 참여를 공식 선언
- **(다자 및 소다자주의)** 중국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미국에 대항하여 다자 및 소다자주의를 내세우고 있음

12) <https://www.bloomberg.com/graphics/2018-china-cobalt/?leadSource=uverify%20wall>

- 미국의 오키우스(AUKUS)에 대한 맞불전략으로 2021.9월 중국은 CPTPP 가입신청을 통해 자유무역 질서를 옹호하는 한편, CPTPP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
-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 전날(5.19) 중국-브릭스(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화상회의를 개최해 브릭스 확대를 논의하는 등 IPEF를 통한 미국의 블록 형성을 견제

4 미-중 탈동조화 가능성

<무역 탈동조화는 진행중>

- 미국의 대중국 견제는 무역제재에서 공급망 재편으로 그 범위를 확장중
 - 301조 관세와 미-중 1단계 합의에서 볼 수 있듯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이 대중 수입은 줄이고 수출은 늘려 무역적자를 해소하고자 했다면, 바이든 정부에서 핵심 공급망에서 중국 배제를 목표로 함
 - 글로벌 생산 공장으로서의 중국의 역할을 축소하고 미국의 생산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대규모 연방재정 지원을 포함한 산업정책을 통해 리쇼어링을 적극 추진
 -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과 더불어 IPEF, 칩4 동맹 등 동맹 및 파트너 중심의 공급망 구축을 시도하며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 공급망에서 중국의 영향력 축소 시도
- 미-중 무역 전쟁, 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등 전례가 없는 사건을 겪으며 미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공급망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로 작용
 - 코로나 봉쇄조치에 따른 반도체 공급차질은 현재까지도 자동차 생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전쟁 이후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는 등 글로벌 공급망 체계의 취약성이 드러남
 - 올해 8월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전쟁 가능성까지 언급되는 등 양안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각국의 시급한 과제가 되었음
- 중국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미-중 간 패권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양국의 패권경쟁이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어 공급망 재편도 불가피한 상황
 - 미국은 중국의 기술 추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핵심 공급망에서 중국을 차단하고자 시도
 - ‘중국제조 2025’에서 내세우는 반도체 자급률 70% 달성 목표는 미국과 미국의 파트너 국가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반도체 공급망의 대규모 변화를 전제로 하는 등 중국이 추구하는 경제적 자립도 공급망 재편이 수반될 수밖에 없음

<미국과 주요국의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

- 주요국에서도 높은 중국 의존도의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으나 패권경쟁을 벌이는 미국과 달리 대중국 통상정책에서 온도차가 발생
 - 중국 배제보다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데 초점이 있으며, 대외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 디커플링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 미국이 '칩4 동맹'으로 거론하는 한국과 일본, 대만 모두 수출과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상회
- 러시아 가스 공급 축소로 유럽 국가들의 동계 에너지 대란 및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전 세계 수입의 15.6%를 차지하는 중국이 반격에 나설 경우 글로벌 공급망에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주요국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2020년 기준)>



자료: UN Comtrade

주: EU는 영국을 제외한 27개국, 북미는 캐나다와 멕시코, 대양주는 호주와 뉴질랜드를 대상으로 함

- 중국은 글로벌 기업의 주요 생산거점이자 판매시장으로 기업 입장에서 중국의 완전한 배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배제할 이유도 없음
- 상하이 봉쇄 등을 계기로 일부 탈중국 행보가 발생한 것도 사실이나 중국을 주요 거점으로 삼되 제3국으로 생산시설을 일부 이전하는 '차이나 플러스 원(China Plus One)'이 글로벌 기업의 주요 전략
- 애플은 공급망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2017년부터 인도에서 일부 아이폰 제조를 시작했으나, 여전히 애플의 생산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95%를 상회¹³⁾
- 중국은 규모와 성장성 측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시장 중 하나이며, 글로벌 기업의 주요 매출처로 자리 매김
- 정부의 친환경 정책과 소비수준 확대에 힘입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 중인 중국의 전기차 시장에서 미국 기업 테슬라는 최근 2년 연속 100% 넘게 성장하며 압도적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음
-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의 주요 거점으로 거듭난 것은 시장 논리에 따른 결과로, 인위적인 리쇼어링과 니어쇼어링은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킬 위험이 있음

13) <https://www.wsj.com/articles/apples-big-bet-on-india-gets-bigger-still-11649682365>

<탈동조화의 한계>

- 인공위성 수출통제 사례에서와 같이 디커플링 전략은 중국과 기술 격차를 벌리는 측면에서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중국의 추격을 완전히 차단할 가능성은 불분명

* 조지타운대학 안보유망기술센터(CSET, Center for Security and Emerging Technology)의 ‘전략 기술의 디커플링(Decoupling in Strategic Technologies: From Satellites to Artificial Intelligence)¹⁴⁾’ 보고서를 기반으로 분석

- 미국은 수출통제를 통해 중국의 인공위성 발전속도를 크게 지연시켰고, 반도체 수출 통제 및 공급망 재편 전략 역시 중국의 추격을 저지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기대할 것으로 추정

* 1980~90년대 미-중 양국은 우주항공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왔으나, 1998년 중국의 민감기술 탈취를 문제 삼으며 미국은 1999년 국방수권법(NDAA)에서 인공위성 분야의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2011년 ‘울프 수정안(Wolf Amendment)’에서 NASA와 중국의 협력을 전면 금지함

- 최근 중국의 인공위성 산업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볼 때, 디커플링 전략이 경쟁자(중국)의 기술 발전을 완전히 막지 못하며 일부 지연시키는 효과만 있다는 것을 확인
 - 반도체 분야에서도 중국이 장기적으로 기술발전을 이어가며 미국에 대항할만한 경쟁자로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공급망이 지리적으로 집중되어 있을수록 경쟁자(중국)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미국의 전략은 유효할 것으로 예상
 - 반도체 설계 기술은 소수의 미국 기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첨단 반도체장비의 경우 네덜란드의 ASML이 독점 생산하고 있어 핵심 공급망이 비교적 집중되어 있음

14) <https://cset.georgetown.edu/wp-content/uploads/CSET-Decoupling-in-Strategic-Technologies-3.pdf>

KITA

TRADE REPORT

2021



서울시 강남구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47층
2022년 10월 07일